

한국당 강력 반대속 여야의원 10명 촉구 결의안 제출

정치권 핵심 쟁점 부상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1일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주문하는 발언에 이어 이날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장정숙·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철승·김현권·노용래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서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장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전 세계가 환영하는 판문점 선언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역대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퇴행한 경험에 비추어 합의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이어 "법률적 검토가 도출될 때까지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결의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 초당적 지지, 지원을 결의하는 국회 차원의 협력에 제발 적극 나서자는 제안을 모든 야당에 드린다"며 "지금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거국적 협력이 나서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국회 선제적 지지·결의해야"

평화·바른미래 일부 결의안 서명

한국당 "부도수표에 돈 넣는 꼴"

안철수 "북미정상회담 후에 논의"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보듯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 별도의 결의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부도수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합의사항 상당수가 미북정상회담 이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추진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미북정상회담 한 번으로 북핵폐기의 결론이 날지, 추가협상이 더 필요할지, 검증절차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비준 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비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이 우선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법적 검토를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지 결정하기로 했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당장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로 여야 간 거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5월 중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전격 거론했다. 사진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분단의 상징' 판문점 '평화 이정표' 되나

남북 이어 북미 정상회담장 거론

靑 "트럼프가 먼저 판문점 제안"

文대통령, 비핵화 절충안 전달 한듯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구현되는 '빅뱅' 가능성이 급속도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합의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을 도출한다면 극적인 효과가 배가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동력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콕 집어 언급한데 이어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공동회견에서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

힌 것은 그만큼 판문점을 유력한 장소로 고민한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장소를 놓고 어디가 좋겠냐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판문점 개최의 장단점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권했거나 설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판문점을 주요 옵션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을 놓고 고민하는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문 대

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북미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북미회담으로 이어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통해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식 해법'인 일괄타결 메시지를 지속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미 현실적 절충안을 북한과 미국에 각각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협상가로서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 것인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대통령 "모든 성장은 노동자 위한 성장 돼야"

근로자의 날 노동절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자신과 부모,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이같이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 정부는 노동 중추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 아버지의 손톱에 긴 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낼 것"이라며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조선이공대학교는 1963년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사학 명문 대학입니다.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계승 발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덕망과 리더십을 갖춘 제11대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초빙 대상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 조선이공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분으로서,
-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분

제출서류

- | | |
|---------------------------|---------------|
| 가. 총장공모지원서 | 나. 대학경영계획서 |
| 다. 자기소개서 | 라.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
| 마. 범죄경력조회서 | 바. 서약서 |
| 사.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
- (해당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www.cst.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및 마감

- 가. 등록 방법 : 방문 등록
 나. 공고 및 등록 기간 : 2018. 5. 1(화) 09:00 ~ 2018. 5. 8(화) 17:00까지
 다. 등록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대학본부 5층, 교수평의회 사무실)

기 타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처 ☎ 062-230-8170/888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